

# “K방역, 모든 국민의 성취·자부심”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尹 ‘文정부 정치방역’ 발언에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정치가 방치… 특별법 통과를” “피해자 중심의 정신 입각서 국힘과 협의할 것” 덧붙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가 취임 1년이 지나서도 국정 모든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고 탓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아님’ 정치 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님’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영과 교훈에 의해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 의료

체계를 보완·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 등쳤다고 한다.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이다.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다행히 어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위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정신 입각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며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 대부분이 청소년·청년·사회초년생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 맞잡는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원쪽)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역점 현안 건의사항들에 대해 면담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노동자 건강권 보호·복지 증진

권요안 도의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가족 위생과 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복지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거나 때문에 찾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 세탁소는 취급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노동자의 보건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탁소 운영 내용을 규정한 제5조에 따르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하고 세탁시스템 구축,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을 규정했다. /김재훈 기자

##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강태창 도의원, 조례안 발의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한 질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2개월분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체를 지급 제한도록 했다.

강태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

무 위반 시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하기 때문에 자방의회 의원에 대

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

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경우 3개월간,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2개월분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체를 지급 제한하도록 했다.

강태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

무 위반 시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하기 때문에 자방의회 의원에 대

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

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마약 청정 전북 만들기 최선”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NO EXIT’ 릴레이 동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미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미약사범 204명 중 20대 이하 청소년이 61명을 차지할 정도로 미약 범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약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26일까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심의·의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특위 구성 결의안 등 채택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5일부터 제40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등을 정부를 상대로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정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 외 출장을 다녀온 상임위원회 등의 출장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제400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1952년 5월 20일 역사적인 첫 회의 이후 71년 만에 제400번째 회의를 여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경기주택도시공사

#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기회파트너

4대전략방향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 |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 동반성장 기회공간 창출 | 신뢰기반 혁신경영 선도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

고품격 공공주택 신축 공급 추진 | 생애주기별 주거사다리 구축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복지 강화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신뢰기반 혁신경영 선도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 미래자족형 3기신도시 개발 |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리스크 관리로 재무건전성 강화 | 투명 공정한 인사조직시스템 구축 |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고도화